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4(목)	
		작 성 · 문 의	사회조정실 교육정책과 과장 김주연 / 서기관 한레지나 (Tel. 044-200-2323)
엠바고	13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

“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 법적 의무,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”

- 황 총리, 전문가 간담회 개최, “법과 원칙의 문제로 의무 이행해야”
- 일부 시·도교육청, 정치적 주장만을 반복, “국민과의 약속 지켜야”
- 유치원(1.22)·어린이집(1.28) 간담회, 사회보장위원회(2.3)에 이어 다시 강조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2.4일(목) 총리공관(서울 삼청동)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유치원(22일)과 어린이집(28일)을 연이어 방문,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지 일주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,

○ 일부 시·도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빚어진 학부모 불안, 교사 임금 체불 등 사회적 혼란과 관련하여 유아교육, 보육 및 교육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□ 황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일부 교육감들의 “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먼저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”는 주장에 대해

- 중앙정부가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시·도 교육청은 그에 따라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,
 - 도입당시 여야합의와 시·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,
 -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'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함을 강조하였다.
- 황 총리는 “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·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,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님”을 분명히 하고,
-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나,
 -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,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.
-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음을 우려한 황 총리는,
- “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”임을 명백히 하고,
 -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.

< 붙임 :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황교안 국무총리의 모두말씀 >

< 황교안 국무총리 모두말씀 >

- 설 연휴를 앞두고 바쁜 일정속에서도,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
 - 일부 시·도 교육청과 시·도 의회에서 법령상 명백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
 - 누리과정 문제가 중앙정부 책임이라든지,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니 교부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
 -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·재정분야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음
-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한다면,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
 -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, 시·도 교육청은 그에 따라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는 문제만 남은 것임
 - 그럼에도 일부 시·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이들을 불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음
 - 누리과정 도입 당시 여야합의와 시·도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

- 시·도 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, '14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함
-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·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, 이는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님
 - 누가 법령상 규정된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,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
 - 정부는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,
 -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
-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적 논쟁에 내몰아서는 안 됨
 -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임
 - 누리과정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
-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께서는 우리사회가 법과 원칙, 그리고 상식이 통하고 지켜지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
 -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